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5월 | AI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2026 May | vol.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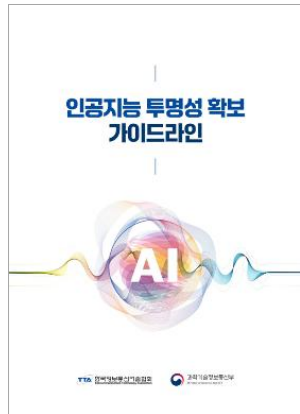
Brief

1	세계경제포럼(WEF), AI 활용 실패 원인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설명가능성·책임 체계 부재 지적...AI 신뢰 체계 내재화 중요
2	과기정통부, AI 사전 고지·생성물 표시·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의 구체적 이행 기준 제시
3	(사례) AWS, ISO/IEC 42001 인증과 책임 있는 AI 원칙 기반으로 데이터·AI 거버넌스 운영체계 구축 및 지원
4	권익위, AI 혁신리더 양성과 청렴행정 혁신 추진...윤경 CEO 서약식에서 AI·ESG 기반 청렴윤리경영과 CP 평가제도 확산 강조
5	EU, 반부패 범죄 정의·처벌 기준 통일하는 신규 반부패 지침 최종 승인...회원국 공통 규제 강화
6	영국 금융감독청(FCA), 생성형 AI 활용한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 확대 추진...금융범죄 대응 및 감독 효율화 강화

목차

1 윤리 체크리스트	AI 신뢰 체계의 내재화 1-1. AI 거버넌스 내재화 - 세계경제포럼(WEF), AI at Work(2026.1) 1-2. AI 투명성 확보 의무와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1.22)
2 사례 돋보기	데이터 거버넌스와 책임있는 AI 운영 아마존웹서비스(AWS)
3 윤리, 지금	권익위 동향 「윤경 CEO 서약식」, AI·ESG 기반 윤리경영 강조 중앙행심위, 뇌물 제공 업체 입찰 제한 처분 정당 판단!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국민권익위 혁신리더’ 양성 청렴문화 확산 위한 민간보조사업 본격 추진
	국내외 동향 EU, 반부패 법안 최종 승인...회원국 처벌 기준 통일 영국 금융감독청(FCA), AI 기반 감독 체계 확대 추진 코트라·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 ESG 공급망 지원 확대 산업통상부, ‘2026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접수
4 윤리 네컷	김대리의 슬기로운 AI 활용법: 데이터, 어디까지 넣어봤니?
5 행사	

AI 신뢰 체계의 내재화



최근 발표된 국내외 주요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 도입의 핵심 성공 요인인 '윤리적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세계경제포럼(WEF),
AI at Work: From Productivity Hacks to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2026.1)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1.22)

- **AI 거버넌스 중요성:** 세계경제포럼(WEF)은 데이터 품질설명가능성책임 체계 부족이 AI 활용 실패와 조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AI 의 영향-조직 역할 구조 변화:** 프롬프트 설계·AI 결과 검증 등 '숨은 업무'가 증가하고, 중간관리자 역할 재설계 필요성 제기
- **AI 투명성 의무:** 과기정통부는 AI 사전 고지·생성물 표시·딥페이크 워터마크 기준 등을 서비스 유형별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공개

AI 신뢰 체계의 내재화

기술을 넘어, 신뢰로 완성되는 AI 활용 환경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01</p> </div> <p style="text-align: center;">AI 거버넌스 기반 구축</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신뢰할 수 있는 AI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체계 강화 설명가능성 확보 및 투명한 의사결정 편향·차별 위험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체계 및 역할 명확화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02</p> </div> <p style="text-align: center;">AI 투명성 및 윤리</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윤리를 강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활용 사실 사전 고지 생성형 AI 콘텐츠 출처 및 표시 딥페이크 워터마크 적용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윤리 준수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03</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조직 내 실행 체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지속 가능한 실행과 문화 정착으로 AI 신뢰를 내재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 위험 점검 및 효과성 평가 임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내부 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 사고 대응 프로세스 마련 및 운영
--	--	---

AI 기술의 가치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신뢰 체계를 내재화하여 지속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만듭니다.

1-1. AI 거버넌스 내재화

세계경제포럼(WEF)은 2026년 1월, "AI at Work: From Productivity Hacks to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확산 이후 조직과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AI를 생산성 향상 도구만이 아닌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과 연관된 요소로 간주한다. 특히, 동일한 AI 모델을 도입해도 조직의 거버넌스 수준과 운영 방식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AI 도입 실패 원인의 상당수는 조직 설계와 관리체계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보고서의 2.2절 "Trust and Governance"에서는 신뢰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AI 확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 기술적 한계보다 데이터 거버넌스·설명가능성·편향 문제라고 설명한다.

(거버넌스) 데이터 품질과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AI를 도입할 경우 조직 신뢰와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기업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AI를 도입했으나 부정확한 응답과 검증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사례를 통해 AI 도입 이전에 데이터 정확성·책임 구조·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설명가능성) AI가 임직원, 고객이 검증 가능한 추론 근거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금융·의료 등 규제 산업에서 AI가 결과를 어떤 근거를 통해 도출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편향·공정성 문제) AI가 기존 데이터의 차별적 패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평판 리스크와 규제 제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AI 도입 이전 단계에서 공정성·책임성·설명가능성 등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그 밖에도 보고서는 AI 도입 이후 조직 내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숨은 업무'를 주요 변화로 언급한다. 직원은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프롬프트 설계 ▲AI 결과 검증 ▲부정확한 응답 수정 ▲데이터 정제 ▲민감정보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AI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구조적 압박을 받는 계층으로 '신입직원'이 아닌 '중간 관리자'를 지목한다. 중간 관리자의 조정·감독·정보 전달 역할이 AI로 대체되면서 역할 재설계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AI 도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고품질 데이터 ▲강력한 거버넌스 ▲조직 재설계 ▲AI 리터러시 및 인력 준비도를 제시한다. 특히 AI의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자를 배포 전에 정의하지 않으면 AI가 조직의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AI 거버넌스 내재화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신뢰·거버넌스	AI 도입 전, 결과의 최종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 소유권을 정의하였다.
	AI 활용 전, 데이터 거버넌스·설명가능성·편향리스크 등 윤리·리스크 사전 검토 절차가 존재한다.
	AI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책임·검토·승인체계를 문서화하였다.
	AI를 단순 실험 도구가 아니라 조직 운영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관리한다.
데이터 거버넌스	AI에 활용되는 데이터 정확성·품질·보안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리 기준이 AI 활용 과정에 준수 및 반영되고 있다.
	데이터 품질 문제 발생 시 수정·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출처·수집 방법·전처리 과정을 문서화하였다.
설명가능성·공정성	AI 결과에 대해 임직원과 고객이 검토 가능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AI 모델의 편향 및 차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사 체계를 갖추었다.
	고영향 분야(금융·의료·채용 등)에서 AI 활용 시 차별적 결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AI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담당자의 인적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였다.
조직 운영 변화	AI 활용 이후 발생한 프롬프트 설계·결과 검증·데이터 정제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AI 활용에 따른 직무 변화와 역할 재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중간관리자 역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교육 또는 업무 재설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리터러시·조직문화	AI 활용 교육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이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AI 윤리 원칙과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을 조직 내부에 공유하고 있다.
문화적 성과	AI 도입 이후 번아웃·업무 몰입도·조직 학습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보고하고 있다.
	AI 활용이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AI 활용 성과를 생산성뿐 아니라 조직 신뢰와 협업 측면에서도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한다.

1-2. AI 투명성 확보 의무와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제 31 조(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구체적 이행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발간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이행 예시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 31 조 투명성 확보 의무를 세 가지 의무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제 1 항)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의무이다. 이는 생성 결과물과 무관하게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고지로, 이용약관·앱 화면·오프라인 안내문 등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제2항) 'AI 생성물 표시 의무'로 생성형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 이용되는지,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로 반출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서비스 환경 내에서는 로고·초기 안내 등 비교적 유연한 표시 방식이 허용되지만, 외부 반출 기능이 있는 경우 결과물 자체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텍스트는 파일 머리말·메타데이터, 이미지·동영상·음성은 가시적 워터마크 또는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메타데이터 적용 후 다운로드 시 1회 안내 제공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제 3 항) 딥페이크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하는 의무이다. 딥페이크는 음향·이미지·영상이 해당하며 텍스트는 제외된다. 실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은 이미지·영상·음성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 가시적인 표현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비가시적 방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상 딥페이크는 재생 구간 전체에 워터마크를 유지해야 한다. 단, 예술·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시간차 표시, 비가시적 방법 등)이 허용된다.

위와 같은 의무 주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AI 사업자이다.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제공하는 AI 개발사업자와, 개발사업자의 AI 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이용사업자 모두 해당하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 를 단순히 업무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AI 로 CG 를 생성해 영화에 삽입한 제작사, 혹은 AI 생성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유튜버는 AI 사업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로 분류된다.

<AI 투명성 확보 핵심 체크포인트>

구분	점검 항목
의무 대상 판단	우리 조직이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AI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운영 중인 AI 서비스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였는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서비스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사전 고지 의무	서비스 이용약관·계약서에 AI 기반 운용 사실을 명시하였는가?
	앱·소프트웨어 초기 화면에 AI 활용 사실을 안내하고 있는가?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는가?
생성물 표시	서비스 환경 내에서 AI 생성 사실을 로고·문구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가?
	다운로드·공유 기능이 있는 경우 결과물 자체에 별도 표시를 적용하고 있는가?
딥페이크 대응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결과물 유형별 표시 방식을 구분하고 있는가?
	실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생성물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영상·이미지 생성물에 가시적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는가?
내부 운영 체계	음성 생성물 재생 초기에 AI 생성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가?
	AI 모델 변경·업데이트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AI 생성물 관련 문의·이의제기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계도기간(최소 1년)내 내부 가이드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TTA,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2026.1.\)](#)
- [WEF, AI at Work: From Productivity Hacks to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2026.1.\)](#)

데이터 거버넌스와 책임 있는 AI 운영

사례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

핵심 키워드: #책임있는 AI #데이터거버넌스 #ISO42001

- ISO/IEC 42001 인증 및 책임 있는 AI 원칙 등을 통해 윤리적 AI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
-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 고객의 입력·출력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전략으로 태깅(Tagging), 라이프사이클 정책(Lifecycle Policy), 정책 기반 운영(Policy-based Management) 제시
- 정책·기술·운영체계를 연계한 데이터 및 AI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고객의 책임있는 AI 활용 지원



아마존웹서비스(AWS)

아마존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는 기업 고객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와 AI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다. 최근 생성형 AI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AI 운영 정책과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AWS의 모그룹인 아마존(Amazon)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고객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한다(We design our systems with the customer’s security and privacy in mind)”고 명시하고 있다. AWS는 2024년 ISO/IEC 42001(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 인증은 AI 시스템의 위험 식별·평가·통제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전반을 제3자 심사 기관이 검증하여 부여한다. 해당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 내부 감사와 경영검토가 의무화된다. AWS는 이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AI 시스템 거버넌스를 유지한다. AWS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오른쪽 표와 같이 책임 있는 AI의 핵심요소와 명문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함께 사례 및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AWS는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Amazon Bedrock'을 운영하면서, 질의응답 페이지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와 출력 결과를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AWS는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단순 보안 기능보다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일관되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AWS 기술 블로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방식으로 리소스 태깅(Resource Tagging), 라이프사이클 정책(Lifecycle Policy), 정책 기반 운영(Policy-based Management) 등을 제시한다. 이는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 **리소스 태깅:** 데이터 자산에 분류 태그를 부여해 프로젝트·환경·비용 등 기준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라이프사이클 정책:** 데이터의 저장·이동·보관·삭제 정책을 사전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운영 가능
- **정책 기반 운영:** 접근 권한, 보안 및 관리 정책 등을 시스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처럼 AWS는 책임 있는 AI 운영 기준 구축 및 검증 등을 통해 AI 윤리 경영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AI 정책,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고객이 생성형 AI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WS 책임 있는 AI의 핵심 요소 및 자료>

1. 안전성(Safety)	AI 시스템의 의도치 않은 해악 방지
2. 공정성(Fairness)	편향 없는 알고리즘 운영 보장
3. 개인정보 보호(Privacy & Security)	고객 데이터 보호 원칙
4. 투명성(Transparency)	AI 판단 근거의 설명 가능성
5. 책임성(Accountability)	오류 발생 시 시정 체계 운영
6. 신뢰성(Reliability)	일관되고 안정적인 AI 서비스 제공
7. 포용성(Inclusivity)	다양한 사용자 집단에 대한 형평성
8.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자원 효율적인 AI 운영

책임 있는 AI 리소스



[출처: [AWS 홈페이지](#)]

참고

[2024 Amazon Sustainability Report](#)

[AWS 책임감 있는 AI 정책](#)

[AWS 기술 블로그: AWS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하기](#)

[AWS 기술 블로그](#)

권익위 동향

권익위 활동

「윤경 CEO 서약식」, AI·ESG 기반 윤리경영 강조

4월 30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2026 제23회 윤경CEO 서약식'에서는 'AI와 ESG의 융합'을 주제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 방향이 논의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AI 기반 ESG 경영과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민간 부문의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윤리경영 문화 확산과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ESG 경영과 AI가 기업 경영의 핵심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청렴윤리경영 확산과 자율준수(CP)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와 ESG의 융합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 경인방송 2026년 4월 30일 <https://news.fim.kr/news/articleView.html?dxno=470096>

중앙행심위, 뇌물 제공 업체 입찰 제한 처분 정당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기업들은 해양 관련 용역업체로,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돼 각각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형사판결에서 이미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된 점, 공정한 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부패행위라는 점, 그리고 제재 기간이 국가계약법상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부패행위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엄정하게 심리해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입찰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5월 6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1157

권익위 정책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국민권익위 혁신리더' 양성

국민권익위원회는 AI-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과 부패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제1기 AI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내부 선발된 'AI 혁신리더' 20명을 대상으로 노코드 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 활용 교육이 진행됐으며, 업무 자동화와 AI 서비스 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AI를 활용해 현업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내부 혁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모임 운영, 외부 전문가 코칭, AI 활용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는 기관 전반에 확산해 행정서비스 혁신과 청렴행정 강화에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5월 11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1428

청렴문화 확산 위한 민간보조사업 본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4개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 단체에는 각각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이 지원되며, 시민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윤리경영 교육, 청렴 연극, 지방의회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선정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와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온라인 점검을 병행해 보조금 집행과 사업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청렴·권익 정책 확산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5월 12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1503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EU, 반부패 법안 최종 승인...회원국 처벌 기준 통일

EU 이사회는 회원국 간 반부패 범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새로운 반부패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민간 부문의 뇌물수수, 영향력 거래, 자금 유용, 사법 방해 등 주요 부패 범죄를 EU 전역에서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고, 기존 반부패 관련 EU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부패 범죄에 대해 최소 수준 이상의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3~5 년의 징역형을 규정해야 한다.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3~5% 또는 최대 4 천만 유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각국은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와 청렴문화 확산 활동도 추진해야 한다.

-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2026년 4 월 21 일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4/21/council-adopts-new-eu-wide-law-to-combat-corruption/>

영국 금융감독청(FCA), AI 기반 감독 체계 확대 추진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6~2027 업무계획을 통해 AI 와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본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CA 는 생성형 AI 를 활용해 기업 제출 문서를 검토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탐지와 감독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동 데이터 연동 시스템과 AI 기반 금융상품 테스트 환경도 확대해 감독 효율성과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CA 는 이번 계획이 "더 스마트하고 데이터 중심의 규제"를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금융시장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 규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CA 는 일반 목적 AI 를 활용한 금융 조언 서비스 확대가 새로운 소비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대응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영국 금융감독청(FCA) 2026년 3 월 26 일
<https://www.fca.org.uk/news/news-stories/fca-sets-out-next-phase-smarter-more-effective-regulation>

ESG

코트라·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 ESG 공급망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KOTRA 는 글로벌 ESG 규제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ESG 협력사업 공동 추진, 공급망 ESG 우수사례 발굴,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OTRA 는 ESG 규제 진단과 전략 컨설팅을, 상생협력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설비 도입·인증 취득·기술 지원 등을 맡아 기존 진단 중심에서 실제 개선과 투자까지 연계되는 '실전형 ESG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26년 5 월 6 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6034900030>

산업통상부, '2026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2026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응모를 오는 6 월 12 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은 민간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기업, 비영리기관 등이며,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포상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며, 응모 비용은 없다. 세부 응모 방법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2026년 4 월 27 일
https://www.korcham.net/hCham/Service/EconBrief/app/ExternalDetail.asp?SEQ_NO=218943

김대리의 슬기로운 AI 활용법: 데이터, 어디까지 넣어봤니?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포럼(2026 GSSF)

ESG 공시 의무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보고와 검증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

- 주관: 이투데이, 한국자연환경복원진흥원,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 주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포럼 대회위원회
- 일정: 2026년 5월 27일(수)
- 장소: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 아틀라스홀(LL)(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B2)
- 참고: <https://esg.korcham.net/NEWSEVENT/?idx=170881482&bmode=view>

50th Anniversary OECD Global Forum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책임 있는 기업활동 기준을 제시해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MNE Guidelines) 50주년을 기념하여, OECD가 개최하는 고위급 글로벌 포럼으로 글로벌 책임경영의 방향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

- 주최: OECD
- 일정: 2026년 6월 29일(월)~6월 30일(화)
- 장소: 프랑스, 파리 OECD본부
- 참고: <https://www.oecd-events.org/e/global-forum-on-responsible-business-conduct>

독자 의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5월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호에서 다룬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의견남기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5월 31일(일)까지

(1)'[의견남기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기프티콘 당첨자 안내

박○수님, 임○희님, 최○혜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응답

★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세요 ★

윤리경영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 |
|----------|--------------------------|
| ① 상담신청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 ② 상담관지정 |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 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과확인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